

# 정유업계, 석유수입사와의 시장경쟁...

## ‘진검승부’의 향방은



여 영 래  
에너지경제신문 기자

그 동안 SK주식회사 LG칼텍스정유 S-Oil 현대오일뱅크(주) 등 정유사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국내 석유제품 유통시장이 석유 수입사들에 의한 시장잠식이 날로 그 세가 더해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크게 소용돌이치고 있다.

석유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판도변화의 ‘전주곡’은 시작된 지 오래며 그 동안 국내시장을 지배해왔던 정유사들의 대응 여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변수는 예상해 볼 수 있겠으나 탄력을 받고 있는 석유수입사들의 외형신장 즉, 몸불리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일수도 있겠으나 최근 들어 국내 석유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제반 움직임들을 두고볼 때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하지만 일단 ‘수익성’ 측면은 접어둔다는 전제 하에 석유수입사들이 오늘 처럼 외형상의 몸불리기를 이뤄내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석유수입사의 수적 증가 추이를 보면 지난 '97년 정부의 국내 석유산업 자유화·개방화 시책의 일환으로 석유수출입업이 종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97년 당시 1개사에 불과했던 석유수입사는 ▷'98년 4개사 ▷'99년 11개사 ▷2000년 5개사 ▷2001년 15개사 ▷2002년 상반기 4개사 등이 정부에 신규 등록, 지난 2001년말 36개사에서 현재는 40개사가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물론 정부에 등록된 업체수의 증가가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는 아니어서 그리 중요한 판단근거는 되질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 등록업체중 일

부(올 상반기 14개사)만이 실제 석유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석유수입사의 수적 증가는 시장 메카니즘 상 이른바 '해볼 가치가 있는' 사업성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며 그 이후 이들 석유수입 전문업체들에 의해 나타난 수입물량의 증가세는 과히 폭발적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의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이들 석유수입사중에는 연간 100만 배럴을 상회하는 수입실적을 거두는 업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 수입사간 외형상의 몸집 불리기도 예사롭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석유수입사들의 활약상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력을 키우기에는 적지 않은 장애 요인이 난마처럼 얽혀 있어 대응여부가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수시장 잠식이 가속화될 경우 시장 지배력이 여전한 정유업체가 좌시하고만 있지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라는 것이 제1차적 걸림돌이라 한다면 현재 업계간 핫-이슈로 부상해 있으면서도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는 원유·석유제품간 관세 차등폭의 확대 문제, 자동차 연료유 품질공개체에 의한 득실, 그리고 외형상의 신장세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수입사간의 시장쟁탈전에 의한 수익성 감소 등이 풀어야할 과제로 도사리고 있다.

## 내수시장 점유율 가파른 상승세 지속

SK주식회사, LG칼텍스정유 등 정유사들의 신경을 곤추세우게 하는 부문이 바로 수입물량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점유율의 가파른 상승세.

산업자원부(석유산업과)가 집계, 분석하고 있는 올 상반기(1~6월) 석유수입사 제품판매 실적에 따르면 휘발유 213만9000배럴, 등유 202만8000배럴, 경유

503만8000배럴, B-C유 186만5000배럴 등 총 1,107만 배럴 규모로 이 기간중 국내 전체판매량(1억 8,976만6,000배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3%에 달해 지난해말의 3.13%에 비해 거의 두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종별로는 휘발유 6.96%, 등유 6.89%, 경유 7.44%, B-C유 3.02% 등으로 B-C유를 제외한 3개 유종은 거의 7%대를 넘나들며 정유업체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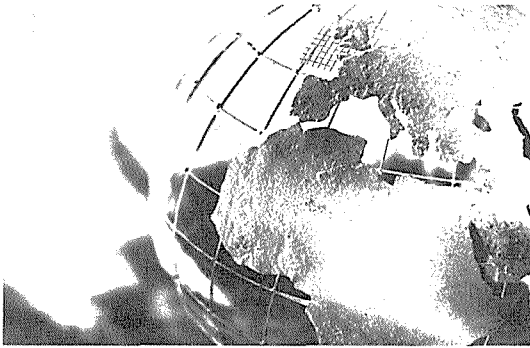
더욱이 지난 7월중에는 이들 석유수입사의 휘발유, 경유, 등유, 병커-C유 등 주요 석유제품 수입판매량이 무려 243만7,000배럴로 이 기간 전체 내수시장 판매량 1,801만배럴의 13.5%를 점유한 것으로 집계돼 석유제품 수입이 자유화된 지난 '97년 이후 수입사들에 의한 수입제품 판매량이 내수량의 10%를 넘어서는 첫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이 같은 석유수입사들의 약진에 대해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세계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해외 현물시장의 석유제품 덤핑공급 만연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관세 차등폭의 미미(원유 5%, 석유제품 7%) 등과 같은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석유수입사들의 수입량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 석유수입사의 內憂, 시장확보경쟁의 걸림돌

이처럼 석유수입사들의 외형상의 급격한 신장세의 이면에는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업권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지경이라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업계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정도를 넘어선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성 과당경쟁으로 함께 망할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업계내부에선 만연돼 있는 위



기감이다. 한마디로 외형상의 몸집 키우기에 비해 내부적으로는 밀지는 장사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들어 일부 석유수입사 관계자들간의 화두가 “그쪽은 (형편이) 어떠냐”고 상대의 처지를 묻는 것이 인사말이 될 정도라니 심한 경영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석유수입사들의 과열경쟁 양상을 지켜보는 시장관계자들의 눈초리는 결코 곱지만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석유수급 상황을 직시할 때 심각한 업계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우려성 지적이다.

“올해 발행된 BP통계 2002년판에서도 적시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석유수입부문 세계 4위, 소비량에서는 6위에 올라 있을 만큼 석유소비대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 원유의 100%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은 물론 정유사들의 설비 과잉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능력이 앞선 지가 이미 오래다. 따라서 좀더 원론적으로 말해 이들 석유수입사가 완제품을 수입하지 않더라도 석유의 내수 수급에는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외화를 들여 무차별적으로 수입해 들어오는 귀한 자원을 업계의 생존권 유지를 위해 ‘막가과식’ 가격경쟁이 성행하는 것은 석유업계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결코 이로움이 안 되는 왜곡된 시장의 전형”이라고 꼬집고 있다.

## 석유수입사, ‘협의회’ 통한 勢규합 움직임 가속화

석유수입사들은 이미 지난 2월말 발족식을 갖고 출범시킨 ‘석유수입사 협의회’를 통해 수입사들의 권익보호를 모든 현안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해나갈 것을 천명하고 나선바 있다. 당시 초대 회장에 선출된 타이거오일(주) 박상준 회장은 향후 협의회 운영과 관련 “이번 발족된 석유수입사 협의회는 앞으로 정부규제에 대한 업계의 공동건의, 정보공유 등을 통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업계가 당면해 있는 현안과제인 ▷원유 및 제품의 관세 차별화 철폐 ▷정부의 비축의무량 감축 ▷공동구매 활동 적극 모색 ▷현행 석유사업법상의 모순점 개선 내지는 보완 등과 같은 회원사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강조, 협의회가 추구해나갈 역할을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출혈성 가격경쟁 양상이 좀처럼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시장상황하에서 업계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대처해나갈 것을 슬로진으로 채택한 석유수입사 협의회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는지 여부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핫-이슈로 떠올라 있는 원유·석유제품간 관세 차등폭 확대 문제의 향방은

정유사와 석유수입사간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는 원유와 석유제품수입시 부과되는 관세액 격차 재조정 문제다.

논란의 요점은 정유사의 경우 현행 원유 5%, 석유제품 7%가 부과되고 있는 관세액 격차를 좀더 벌여야 한다는 논리인 반면 석유수입사들은 “석유산업 자유화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관세율 7%도 높은 수준”이라며 “중소 수입사들이 동등한 여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강력 반박하고 있는 형국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 같은 석유업계 일각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관세 차등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굳이 그 진원지를 찾는다면 지난 '97년 정부가 국내석유산업을 자유화하는 과정에서 원유와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균등(당시 5%)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시장을 개방,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 단초가 됐던 것.

이후 정유업계를 중심으로 관세 차등화 폭의 확대를 요구하는 잇단 건의 및 요청이 이어지면서 지난 2000년 이후부터 현재와 같은 원유 5%, 석유제품 7%(할당관세)의 관세가 매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원유를 해외에서 들여와 정유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정유사들의 입장은 "외국의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 안보 및 자국내 생산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 원유에 대해선 무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제품수입시에는 고율의 관세 부과를 제도화해 자국 석유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임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정유사 단체인 대한석유협회는 정부에 낸 건의서를 통해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차등화 필요성으로 ▷공정한 경쟁의 틀 확립 ▷에너지 수급안정성의 확보 ▷국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증대 ▷소비지 정제주의 기초하의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는 차등폭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논리적 배경으로 정유업계는 "원유·제품간 관세 차등화는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든지 수입사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위하여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선행한 정유사와 해외의 Spot성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사간의 국내에서의 공정한 경쟁들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며 "일부 석유수출입업자가 마진 좋은 특정 석유제품만을 선택, 히트 앤드 런(Hit & Run) 식으로 수입 공급에 나설 경우 연산

품인 석유의 특성상 국내 석유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게 돼 공급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유업계는 "주요 외국의 경우 자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이미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차등관세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지난 4월 1일부로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관세차이를 더욱 확대, 원유의 경우 관세를 20% 인하(관세율 0.9%)한 반면 휘발유 및 경유는 1% 인하(관세율은 5~5.7%)에 그쳐 원유, 제품간 관세차이를 거의 5%포인트 수준으로 재조정할 상태"임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측도 관세 차등폭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율은 2%포인트의 차이를 두고 있으나 격차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국내 석유산업 대외개방의 진전에 따라 원유와 석유제품의 관세액 차이를 경쟁국 수준으로 맞춰갈 필요성은 상존해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석유제품의 경우 연산품인 관계로 개방된 석유시장에서 각국은 일부 유종의 저가 수출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관세액 차이가 적을 경우 국내 석유시장은 외국사의 덤핑물량 소비처로 전락, 국내 정유산업의 존립기반의 약화 및 석유의 공급안정성에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면서 "석유수입사의 경우 정제시설 투자 없이 시장상황이 유리할 때만 시장에 참여하는 형태로의 영업활동이 가능함은 물론 제품 수입물량 비중이 과도하게 커지는 등 수급구조상의 문제점도 적지 않은 실정"임을 지적하고 있어 관세 차등화 문제는 가까운 시일내(늦어도 연내)에 수면위로 떠올라 어떠한 형태로든 교통정리(?)가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